

大學의 民主化와 統一論議

李 三 悅
(崇實大 哲學科)

1. 머리말

大學의 민주화가 통일 논의에 어떠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일반 사회의 민주화가 통일 논의나 운동에 일으킨 변화를 반성해 본다면 상상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것은 民主化와 統一이 갖는 구조적 연관성 때문에 민주화의 성격이나 정도는 반드시 통일 논의의 구조와 방향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88년에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의 분위기와 함께 大學 안에서의 열띤 통일 논의와 운동을 경험했고, 또 학생들의 南北 학생 회담 추진 운동이나 主體思想에 관한 토의들이 統一論議의 구조와 성격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남북 회담 추진이나 주체 사상의 토론은 아직 大學의 民主化에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학의 민주화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의 차원에서 일어난 통일 운동의 한 면이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관찰일 것이다.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과 大學의 民主化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과격한 민주화 운동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아직 민주화가 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을 구성하는 것은 학생들만은 아니며, 물론 교수들이나

총·학장만도 아니며, 그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 놓는 學問 研究와 敎育과 文化, 生活 전반을 가르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민주화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민주화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대학의 민주화에 들어서는 문턱에 겨우 도달해 있다는 것이 정직한 판단일 것이다.

2. 社會의 民主化와 大學의 民主化

대학의 민주화는 사회의 민주화의 한 부분이며, 사회 전체의 민주화 없이는 대학만이 따로 민주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흔히 대학의 민주화를 總·學長의 직접 선거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 한 가지만도 비민주적인 시대에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임명되거나 선임되었으며, 사회 분위기가 민주화해 가니까 교수평의회도 생기고 총장 직선제도 도입되게 되었다. 공장에서 노조가 조직되고, 기자들도 연구소에서 노조를 만드니까 대학의 사무 직원들도 노조를 결성하게 되며 농성이나 파업까지도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대학 사회도 분명히 하나의 부분 사회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를 계도하고 앞장서 나가야 할 대학 사회가 전혀 自律性과 民主性을 확보하지 못

하고 權力의 시녀가 되고 御用化되었던 것은 불행한 역사였다. 학생을 뽑고 졸업시키는 일에서부터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일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文敎部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지난 27년간의 우리 大學은 그야말로 비민주적인 제도의 표본이었으며 非自律의 실체였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知性들이 모인 敎授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교수회의나 평의회마저 구성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시험지를 평가할 자유마저 빼앗긴 채 A학점이나 B학점을 주고 싶은 학생에게 상대 평가에 의해 억지로 C나 D학점을 주어야 했던 것이다. 학생들과 흥금을 털어 놓고 이야기도 못하고 강의 내용과 연구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었던 교수들에게서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었다.

이제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대학이 민주화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너무나 오랫동안 他律과 統制 속에서 체념해 버린 채 안일과 무관심 속에 지내온 大學社會가 自律化되고 民主化되지 않고서는 나라 전체의 민주화는 이룩될 수가 없다. 그러나 大學의 민주화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요즘 대학의 민주화 바람과 함께 대학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까지 文敎部나 情報部가 주인이었는데 갑자기 자율화를 하라니까 누가 주인인지가 막연한 것이다. 그래서 總・學長의 選任도 교수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재단 이사회가 계속해야지 교수의 임명권자인 총장을 임명받는 교수들이 선출할 때 어떻게 소신을 갖고 행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니까 학생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대학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간단히 대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빼앗긴 교수들의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대학의 주인이 교수들만일 수는 없다. 교수들이 주인인 일부인 것은 사실이지만 몇 %를 차지해야 하는가가 문제다. 요즘 敎育法의 개정용을

고 총장, 교수, 학생, 동창회, 재단 등의 관계가 분명히 정립되지 못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아마도 당분간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의 制度는 이러한 자율적 실험과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으며 정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민주적인 제도의 확립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로 서독의 경험을 살펴 보면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1968년대 학생들에 의해 일으켜진 反권위주의 운동은 독일뿐 아니라 서유럽을 온통 휩쓸었고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대학내의 권위주의적 구조와 요소들을 척결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교수에 대한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교수가 강의실에 입장할 때 책상을 두드리며 환영하던 습관도 버리게 되었으며, 강의 방식도 설교식에서 세미나와 토론 방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다. 총장의 선출과 대학 운영 방식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령 서베를린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시위와 소요 및 점거 속에서 교수와 조교, 학생 3자가 완전히 평등한 1/3의 권리를 갖는 3분의 1 平等制(Drittelparität)가 실시되었다. 그래서 총장 선출에서도 결국은 교수들의 지지를 받는 교수 후보가 떨어지고, 학생들과 조교들이 연합 전선을 펴서 과반수를 이루어 조교(wissenschaftlicher Assistent)가 총장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박사 학위도 하지 않은 사회학과 조교가 베를린대학 총장으로 5년간을 봉직했던 사실은 대학의 역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남겨 놓았다. 그 뒤로 이러한 무리가 반성되어 총장은 교수 중에서 선출한다는 조항이 붙게 되었지만, 누가 총장이 되어야 하고 대학의 주인이냐 하는 논쟁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 나중에는 대학의 사무 직원들도 선거권을 요구해 10%의 대표권을 인정해 주는 관례가 생기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민주화 논쟁은 이제부터 심각하게 전개되리라 보여진다. 이제까지 官權 아니면 돌멩이와 화염병을 든 학생들밖에 세력이 없어 게임이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제부터는 교수들, 재단측, 동창회, 직원 노조 등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참으로 合理的이며 포용적인

민주적 방식이 강구되지 않으면 어렵게 되리라고 짐작된다. 대학 민주화의 핵심적 문제는 결코 총·학장의 민주적 선거에만 있지 않다. 총·학장의 권한도 결국은 교수평의회나 학생 총회, 동창회, 재단 이사회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흐를 위험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 관계의 마찰 속에서 대학의 학사 운영이 어떻게 효율적·합리적으로, 그러면서도 민주적 합의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대학 운영의 문제는 교과과정의 운영과 교수의 인사에 관한 문제이다. 많은 대학이 아직 재단의 非理나 不正을 척결하고 총장 선출 문제에 매달려 있으나, 대학 민주화의 핵심적 문제는 역시 敎育과 研究에 있으며,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건은 교과과정과 교수의 연구 업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아직 교과목의 책정이나 교수의 선임이 합리적·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수의 선출권을 해당 학과의 교수들이 대부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여기에도 심의 절차나 합의 과정에서 무리와 모순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문의 업적보다 인간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든지 동창 관계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교수들끼리 합의하기가 어려우면 안 뽑아버린다는지 하는 모순들이 오늘날 교수 선출을 보다 더 합리적·객관적으로 해야겠다는 주장의 이유이다. 교수의 선출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나 동창들이 관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나, 교수들끼리 뒷전에서 타협해 버리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는 것처럼 해당 과의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앞에서 공개 강의같은 테스트를 해서 여론을 참작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大學의 民主化와 統一 研究의 自由

그러면 이러한 대학의 民主化 과정은 작금에 大學社會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統一論議에 어떻게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대학은 물론 통일 논의만 하는 곳은 아니며, 또한 통일 논의가 대학에 의해 독점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학의 민주화는 1차적으로 대학의 조직과 운영·관리의 민주화를 말하며, 다음으로 교과과정이나 학문 연구 그리고 대학 문화에 나타나는 과정이다. 대학이 통일 문제와 같은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학문과 연구 및 교육의 기능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사실상 이제까지 대학 사회와 통일 문제와의 관련에 관심을 갖거나 문제되는 것은 대학의 학문 연구나 교육을 통한 것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대학생들의 급진적 운동과 통일 논의에 따른 결과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의 어느 연구소에서 통일 방안에 관한 획기적 연구가 나왔기 때문이라든가 공산권이나 북한에 관한 새로운 학설이나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판문점에서 김일성대학생들과 담판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국토 순례 대행진을 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학생들은 이러한 南北交流나 회담의 주장을 하면서 어느 大學 연구소나 교수의 연구 논문을 일언반구도 인용하거나 참고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88년 2월 29일에 발표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선언서'가 통일 운동의 새로운 기운을 일으키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大學의 民主化와 統一論議에 관련해서 심각히 반성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 수 많은 대학의 政治學科와 外交學科 그리고 수 많은 社會科學者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의 死活과 運命이 걸린 統一 문제를 놓고 과연 무슨 연구를 하였으며 무슨 論文들을 썼던가? 과연 그들의 연구와 논문들이 오늘날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데 얼마나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던가? 아니 그것보다도 全大學生들이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하는 國民倫理 교과서에 통일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며, 民族 發展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大學에 統一 문제 연구소가 열 개가 있으면 될하고 백 개가 있으면 될하는가? 國民倫理學科와 哲學科와 政治學科

가 수십 개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민족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연구도 하지 않고 교육도 하지 않는데 문교부나 안기부의 시달에 의해 安保 교육이나 反共 교육이나 하고 있는 대학의 현실을 가지고 무슨 통일 논의와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대학의 이와 같은 학문적인 비참함을 自省해 볼 때, 오늘의 참여적이며 행동적인 대학생들이 대학교육과 교수들을 외면하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은 너무도 이해할 수가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독재 정권에 완전히 재갈이 물리운 이 나라의 대학과 교육이 학생들이 그토록 회생을 치루며 民主化 운동에 나섰어도 학생들에 대한 변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과격함만 나무라고 적당히 강의를 때우고 안일함에 빠졌던 대학과 교수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일부의 어용성 교수들은 유신 때는 유신 체제를 옹호하여 지지했고, 5共 때는 5共 정권을 옹호하며 비호해서 학생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은 찾아 볼 수가 없는 이들이 많다. 아무 말도 못하고 無氣力하게 왔다갔다 하며 줄일식장에 가운데나 입고 근엄하게 행진이나 하는 교수들을 향해 학생들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풍토와 분위기 속에서는 統一 논의에 대한 공헌은 고사하고, 學問的 연구와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발전할 수가 없다. 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나 논의도 대학의 학문적 연구나 논의가 정상화되고 합리적이 될 때에 무엇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대학의 연구나 교육이 모두 대학의 自律性과 民主化와 관련을 갖고 있지만, 統一 문제에 대한 연구나 교육은 특히 이것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존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학의 국민윤리 교육과 이념 교육이 지금까지처럼 北韓이나 共產圈의 이념과 현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적대시하는 것으로 있을 때, 그리고 남한의 유신 체제나 5共和國을 自由民主體制로서 변호하고 독재와 횡포, 비리, 인권 탄압을 한마디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서는 남한만을 위한 安保敎育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반도의 平和나 統一 교육은 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대학의 理念 교육이나 국민윤리 교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分斷體制와 意識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자칫하면 分斷 固定化에 기여할 수밖에 없고, 통일이나 평화 공존마저도 망각한 교육이었다고 하겠다. 통일 방안에서 外勞에 의존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民族이 自主的으로 통일해야겠다는 학생들의 주장이나, 민족 통일은 기독교를 가진 지배층보다는 民衆이 主體가 되고 민중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학생 운동권의 주장에 대해 大學의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을 담당 한 자들은 이것이 北韓의 南朝鮮 赤化統一과 일치하는 것이며, 남한을 독립시켜 공산화하겠다는 책략이라고 마치 정보부의 국가 안보 담당관과 똑같은 소리를 대학 강단에서 외쳐대었다. 말하자면 南·北韓 정부가 이미 1972년에 합의한 7·4 共同 성명의 3대 원칙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反統一的인 교육을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국민윤리 교육과 反共理念 교육을 그대로 두고서 대학이 통일 논의에 기여하거나 통일 문제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를 해낼 수는 없다. 왜 도대체 維新 때는 維新 헌법이 가장 한국의 현실에 맞는 民主制度라고 하고, 5共 때는 5共 헌법이 가장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제도라고 옹호하는 그 따위 정책 과목을 대학이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왜 이것은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대학의 훌륭한 교수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되거나 시정되지 못하는가? 대학에 수백 개의 연구소와 전공 학문 분야들이 있어도 통일 문제에 관한 인식과 교육을 이런 국민윤리적 시각에서 관망하며, 여기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容共視하고 위협시키는 풍토에서는 결코 객관적이며 알맹이 있는 통일 연구나 교육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은 통일 논의가 권력 기관이나 정부에 독점되지 않고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는데, 대학의 학문적 연구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금 대학이 民主化되고, 대학의 연구와 학문 자체가 대학인들 스스로에게, 즉

교수와 학생들에게 돌려지게 될 때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4. 民主的 統一論議와 大學의 役割

흔히 통일 논의가 완전히 자유화되거나 민주화되면, 남한의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에 유리한 통일 논의들만이 무성하게 되리라고 주장하며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않게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대학의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자들은 대학의 민주화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민중통일론, 민족해방통일론이 우세하게 되어 결국 대학 사회가 적화 통일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염려해 왔다. 그러나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나 통일 운동을 그 내부적 토론에서 세밀히 관찰해 본다면, 일부의 과격한 친북한적 통일론자들도 있으며, 소위 주사파(主體思想 신봉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를 전체적 경향이라고 매도하거나 학생들을 무조건 몰지각한 공산주의자나 북한의 숭배자들과 보고 보는 것은 크게 잘못이며 사실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제까지 이런 평가를 해 온 정보 기관이나 대학 이념 교육자들은 학생 운동의 내부와 흐름을 사실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大字報나 傳單에 나타나는 몇 가지 구절들을 빨간 줄을 쳐서 인용하며 쉽게 그런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상례였다. 이에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분석을 하니 과격한 학생들의 운동론은 전부 공산화 통일론으로밖에 평가될 수가 없었다. 학생들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고민하며 심각하게 찬반 토론을 하는지, 그들이 기성 세대의 교수들이나 학자들을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만한 연구 서적들도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는 토론 과정이라든지 보다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관찰한다면, 즉 이들의 태도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 참여적인 관찰을 통해서 한다면, 그렇게 쉽게 학생들의 주장이 적화 통일 노선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설사 학생들의 통일 논의나 시각이 좌경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고 편향되었다면 이를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교수들의 책임이며 대학 연구의 사명이다. 대학의 연구소나 학회들이 이런 문제들을 학내에서 토론하여 연구하지 않고서 과격한 학생들만 나무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성 학자들은 反共法과 국가보안법이 무서워 공산주의 이념이나 북한에 관한 서적을 읽는 것도 두려워 해 왔고, 학문적인 비판을 위해서도 원전들을 읽어야 하는데, 공부하지 않고 적당히 비판만 해 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몰래 지하 씨클을 만들어 이런 책들을 읽고 이론적인 무장을 한 학생들과 토론하거나 대화를 벌이기도 두려워 해 온 것이 대부분 교수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이제 새 시대의 민주적 통일 논의에 대학이 바르게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비민주적이며 反自律의인 모습들이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 교수들은 연구의 자유를 누려야 할 뿐 아니라, 대학의 연구 기관들은 여러 가지 필요한 서적과 자료들을 갖추고 공산권이나 북한에 관해서도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은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연구는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은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이론적으로 밑받침하기 위해 몇몇 친여적인 학자들을 데려다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책 개발을 위해 통제 받지 않는 연구비를 대학이나 연구소에 지급해야 하고, 대학은 이를 가지고 필요한 인원과 자료를 갖추면서 본격적인 연구를 해 가야 할 것이다. 연구가 없이 대학이나 연구소가 무슨 통일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어떻게 과격한 학생들의 통일 논의를 지도하고 시정해 가라는 말인가?

과거에는 통일 문제를 정부, 그 안에서도 핵심적 정보 기관이 독점해 왔고, 모든 자료와 정보는 극비에 붙여졌으며 소수의 전문가들을 몰래 동원해 남북 대화나 통일 방안의 전략을 짜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이제 민주화의 시대에 들어와 통일 정책도 정부가 독점할 수 없고 각계에서 일어나는 통일 논의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면, 이제는 늦었더라도 올바른 통일 논의와 민주적 통일 논의를 위해 대학의 연구를 대폭 확대하며 연구의 자유와 자율성을 허여해

주고 상당한 예산과 인원을 지원해 주어 객관적으로 연구되고, 여러 분야에서 검토되고 합의된 통일 방안을 민주적으로 만들어 가는 도리밖에는 없는 것 같다. 이 중대한 민족적 과제를 정보부의 밀실에서 소근거리하는 비밀 연구나 과격한 운동권 학생들의 지하 씨클에서의 연구 토론에

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으로 하여금 수많은 전문 인력과 고급 두뇌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대학의 구조나 학문의 풍토가 보다 철저히 민주화되고 자율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39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 및 教授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敎育 과정이나 敎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 ① 論 壇 ② 敎授談論 ③ 學科別 敎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 (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89년 3월 20일
4. 稿 料—매당 2,5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敎育協議會 (전화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